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 제안 기자회견

2004. 12. 21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순 서 -

- 인 사 말
- 경 과 보 고
- 조 직 구 성
- 사 업 계 획
- 기자회견문 낭 독
- 질 의 응 답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 ■ 경과보고

- [1] 2002. 12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됨.
- [2] 공약을 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3년 2월「참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재차 확인한 바 있음.
- [3] 2003. 12. 29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83%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제정 통과됨.
- [4] 2004. 8. 11 4개 후보지를 놓고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최종입지를 확정 발표함.
- [5] 2004. 10. 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상실됨.
- [6] 2004. 10. 21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7] 2004. 10. 22 자치분권전국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단체들이 비상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에 역행하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과 집회 등을 개최하기로 함.
- [8] 2004. 10. 25 자치분권전국연대의 주최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과 아울러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습헌법이란 해괴망측한 논리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산시킨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함.
- [9] 연기·공주 편입지역 주민은 물론 500만 충청인들은 현재 결정에 당혹감을 떠나 분노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10/28 대전역에서, 11/3 천안아라리오광장, 11/9 충북도민대회, 11/22 조치원역 광장 집회 등 40회의 규탄대회가 개최됨.

[10]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분권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기자회견, 서명운동, 촛불 문화제, 향의시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단 면담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정당성을 전국에 홍보함.

[11] 2004. 11. 22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초정파적·범국민적 협력과 단결을 위하여 충남 지역의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신행정수도 사수 범충남연대』를 출범식을 개최함.

[12] 2004. 11. 31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단결과 협력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충북 비상시국회의』를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로 확대개편함.

[13] 2004. 12. 1 범충청권협의회 결성과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대한 충청권의 단결을 위해 대전지역의 기관·단체를 총망라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출범식을 개최함.

[14] 2004. 12. 4 연기군 비상대책위와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주최로 신행정수도 사수 및 현재 위헌결정 규탄 범국민대회를 서울 종묘공원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함.

[15] 2004. 12. 10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결성을 제안기로 의결함.

[16] 2004. 12. 17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결성 기자회견을 대전,충남,충북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하나은행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사업계획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제안 기자회견을 12월 21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17] 2004. 12. 17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회의에서 12월 21일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제안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할 것을 결의함.

[18] 2004. 12. 21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함.

## ■ 조직구성

- 조직명칭 :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 제안배경 및 내용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 제안
- 획기적인 지방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일괄하여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준하는 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실행을 촉구
-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촉진하는 국민운동의 전개를 사업과제로 제안

- 참가범위

- +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인사
- + 참여자치지역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여연 등 전국시민사회운동단체에 제안

- 조직구성

- + 고문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지지하는 한국사회 원로급 인사
- + 대표자회의(공동대표) :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
- + 상임공동대표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1인씩 3인, 권역별(수도권 /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대표 1인씩 4인, 총7인
- + 집행위원회 :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단체의 실무책임자
- + 공동집행위원장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1인씩 3인, 권역별(수도권 /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대표 1인씩 4인, 총7인

- 결성일정

- +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참가동의서 및 임원취임 승낙서 발송(2004년 12월 말)
- + 참가동의 및 임원취임 승낙 취합(2005년 1월 초)
- +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을 위한 실무회의(2005년 1월 초)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 기자회견 개최(2005년 1월 중순)

## ■ 주요 사업계획

### 1.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월 중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개최

###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워크숍 개최

- 일시 / 2004년 12월 말
- 장소 /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영남권)

### 3. 범국민대회 개최

- 일시 / 2005년 2월
- 장소 / 서울시내 일원
- 후속 국민대회 개최 / 2005년 3월경 추진

### 4. 국회농성단 운영

###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전국순회토론회 개최

### 6.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전국 투어 및 순회 공연단 추진

### 7. 홍보물제작

- 홍보버튼, 스티커, 유인물 제작
- 호외 제작 및 배포
- 영상홍보물 제작

## ■ 기자회견문

#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문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염원하였던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절박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추진되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결정은 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확고한 의지 없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선도사업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살리기 정책이 가시화되려는 초기단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좌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무력화하며, 중앙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편승한 反분권 - 反분산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중앙관료와 학자, 언론에 의해 지방분권과 지역분산 정책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암초에 부딪혀 지방을 더욱 공동화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의 결성을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에게 제안하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결사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에 참여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의 원안대로의 추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협력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4. 언론은 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의 취지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결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를 염원하는 뜻있는 정치인과 단체,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이다.

2004. 12. 21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